

4당 여성정책 차별성 회해야

“여성, 원호의 대상 아니다”

획일적인 시혜성 정책 탈피, 사회 개혁위한 장기정책 필요



지난 20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각 분야 여성들은 “정당 여성정책이 여성을 위해 뭔가 해주겠다는 시혜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전체의 의식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여성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여성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 한 여성계 인사의 자조적인 말이다. 그만큼 정당에서 내건 여성정책은 취업, 탁아, 교육, 성평등 등에서 완벽한 ‘여성유토피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선거 때 내건 여성공약은 정권을 잡은 여당에서는 다른 정책에 밀려,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은 힘이 없어서 물거품이 되기 일쑤다. 그럴땐 차라리 정당별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내걸고 그 분야에 집중적인 실천력을 투자하라는 지적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것이다.

지난 20일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린 '95서울국제여성전 세미나 '15대 총선을 대비한 여성정책의 방향'에 참석한 각 분야 여성계 인사들은 당별로 여성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각 당 여성정책 차별성 없어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이경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지영선 한겨레 신문 부국장, 이영애 교수(단국대 정치학과), 이은영 교수(외국어대 법학과)가 참석했다.

이들은 정옥순 신한국당 여성국장(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신낙균 부총재, 민자당 김원웅 의원(국회 여성특위 민주당 간사), 고은정 자민련 총재 특별보좌관이 발표한 각 당의 여성정책을 검토한 후 “여성정책이 이상하리만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자민련의 여성정책 중 기혼여성이 국민연금에 단독

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가 주목될 뿐 나머지는 모두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각 정당은 보수와 진보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성정책에서는 그런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의아하다.

진보적인 당은 진보적인 여성정책을, 보수적인 당은 보수적인 여성정책을 내걸어야 유권자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성정책은 여성정책에 실린 여성관, 국제적인 합의수준, 여성계의 요구수준에 얼마나 부합했는가를 따져봄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여성정책 자체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체계, 인적자원, 재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당의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 공동대표는 15대를 앞두고 각 당에서 여성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최소한 내년 부터 2천년까지의 장기적인 여성정책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성, 사회대상 정책 필요

“매번 선거때마다 가사노동의 가치상징이나 교육개혁,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지만 아직까지 흔쾌하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적이지 않다는 것이 된다”며 각당이 소개한 여성정책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현실화될지에 대해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지 부국장은 얼마전 통과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나치게 서둘러 제정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진정 여성을 위한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 허술한 것이냐 일단 통과시켜 보자는 욕심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꼬집기도.

지 부국장은 또 “각 당의 여성정책을 보니 전부 여성에게 뭘 해주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은 원호의 대상이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 남성과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때다.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힘들어 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성위주의 문화 때문이다. 여성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는 장기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이영애 교수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 교수는 “각 정당이 여성정책에 관해 공동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과연 그럴까하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며 모든 여성문제는 뿌리깊은 ‘이중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직도 성차별로 인해 생명권, 자율권, 재산보호권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

며 특히 음란물, 매·매춘, 낙태 등 음성적인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은영 교수는 “각 정당의 대표들이 여성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자니 너무 재미가 없었다. 한당이 여성정책을 발표하면 다른 당은 우리 당은 그것과 다른 어떤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다른 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식이어야 하는데 너무 똑같아서 그런지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듣는 듯 했다.”며 정당의 획일적인 여성정책을 지적했다.

여성계 의견 수렴 돼야

이 교수는 “여성계가 요구하는 여성정책은 할당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탁아시설 확대, 여성부 설치 등 꼽히는 몇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별 정책 방향을 오는 총선에서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또 신한국당이 여성발전기본법을 ‘밀실작업’으로 제정한 것에 대해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여성발전기본법은 법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이지 법이 아니다. 몇개의 조항을 빼놓고는 계몽, 사회의식화 작업의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 제정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국민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처럼 쉬쉬해서 제정하고 통과되고 보도도 안되는 식으로 만들어서는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성계 대표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자 각 당의 참석자들은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한마음”이라며 다소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지만 15대 총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서둘러 했다.

(황금희 기자)

당색 드러날 여성정책 수립, ‘차별성’으로 유권자에 다가서야 서울국제여성전 세미나서 각 분야 여성계 인사 지적

당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한 정당이 어떤 여성 정책을 발표하느냐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은 후 여성정책이 얼마나 실현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당의 여성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공동대표에 따르면 여

없다. 이제는 얼마나 공약을 실천하느냐를 따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부연한 이 공동대표는 이번 15대 총선에서는 그러한 여성공약이 여성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영선 한겨레 신문 부국장은 “각 당의 여성정책이 비슷하다는 것은 듣기에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생각하자면 그만큼 현실